

김정은 체제의 경제 분야 과제와 전망*

조 봉 현**

- I. 서론
- II. 북한의 선군경제발전 전략과 그 한계
- III.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변화
- IV. 김정은 체제의 대남경협 전망
- V. 결론

국문요약

연구목적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풀어야 할 경제 분야 과제와 이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고찰하고, 향후 대남경협에서 어떻게 나올지 전망하는데 있다. 김정은 정권은 선군경제발전전략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다. 김정은 체제는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민들로부터의 지지를 얻지 못해 체제 안정화도 장담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의 새 지도부는 유호통치를 이어가되 일정 시점 이후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김정일 위원장 시대와는 차별적인 정책적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노동신문을 분석해 본 결과,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 및 인민생활 개선과 광물, 전력 등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력강생의 한계를 인정하고 외자유치를 위한 부분적인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 김정은 체제에서 대남경협은 어떻게 접근

할지 북한내 체제변화와 대외적인 경험여건 변수를 축으로 4가지 시나리오별로 전망해 보았다. 단기간에는 경제협력 재개가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대중의존도 완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대남경협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개성공단을 시발점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 경제특구 개발에 남쪽의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 김정은 체제 출범에 맞춰 우리 정부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한반도 안정적 관리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남북경협 수준을 넘어 한민족의 경제발전이란 관점에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는 전략이 요구된다.

주제어: 선군경제발전, 개혁·개방, 대남경협, 노동신문 분석, 한민족 경제

I. 서론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은 김정은 체제로 점차 안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제4차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를 통해 김정은은 노동당 제1비서

* 본 논문의 개선을 위하여 훌륭한 코멘트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됐다. 결국 김정은이 군(軍)과 당(黨), 정(政)을 아우르는 북한의 최고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북한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 경제문제 해결 없이는 북한 체제의 안정화를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는 지금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경제난 해결이 최우선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김정은 체제의 새 지도부는 인민생활 개선 등 경제회생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김정일 시대의 정신적 기조인 선군정치를 포기하지도 못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 개혁과 체제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 경제의 앞날은 달라 질 것이다. 기존 경제시스템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 개혁·개방의 길로 나설지 기로에서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북한경제의 미래도 달라 질 것이다. 경제난 해결을 위해 대남경제협력을 복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김정은 체제가 풀어야 할 경제과제는 무엇이며,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어디로 갈지 전망하는 것은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북한의 선군경제발전 전략과 그 한계를 통해서 김정은 체제가 풀어야 할 경제적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북한이 구상하는 경제정책 및 개발 방향을 고찰해 보고, 제4장에서는 향후 대남경협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망하며, 마지막 결론에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¹ 자료의 한계 등으로 우리식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 향후 북한의 경제 방향에

¹ 김병욱, “김정은 권력승계 이후 선군경제운영과 국제사회 변화 동향,” 『KDI북한경제리뷰』, 2월호 (KDI, 2012); 김석진,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 전망과 시사점,” 『통일경제』, 1호 (현대경제연구원, 2012); 동용승, “2012 북한경제 전망,” 『KDI북한경제리뷰』, 1월호 (KDI, 2012); 박형중·조한범·장용석,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09); 양문수, “김정은 시대의 증장기 경제정책 변화 전망,” 『통일경제』, 1호 (현대경제연구원, 2012); 이교덕, “김정은 체제와 2012년,” 『KDI북한경제리뷰』, 1월호 (KDI, 2012); 홍익표, “김정은 체제의 북한 ‘경제강국’ 건설의 전략과 과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52차 전문가 포럼, 2012); 이상숙, “자립과 의존의 딜레마 극복을 위한 북한의 선택,”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52차 전문가 포럼, 2012); 홍순직, “포스트 김정일 시대 개박: 2012년 유신통치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1) 등 다수.

대한 심층적인 조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 제1비서가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를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노동신문 등 북한 내부 자료를 토대로 가능한 북한 내부의 시각에서 접근해서 분석하고 전망해 보고자 한다.

II. 북한의 선군경제발전 전략과 그 한계

1. 선군경제발전 전략

북한은 군(軍)을 제일로 하는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있다. 선군정치는 1995년 새해 첫날에 김정일 위원장이 다박술 초소²를 현지 지도하면서 처음 언급되었다. ‘선군정치’란 용어는 1997년 12월 12일자 『노동신문』 이후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취임(1998)과 함께 북한의 핵심적 통치방식으로 정착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김정일 시대의 핵심사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선군사상 일색화’를 주창해 오고 있다.

북한에서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권 붕괴로 초래된 외교적 고립과 위협, 경제 악화 등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군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인민경제를 회복시키고, 당의 저하된 사회통제 기능을 군 조직이 나서 질서유지를 한다는 것이다.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협상 과정에서 군대의 역할과 위상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축으로 해서 군의 영향력을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 영역에 투영시키고 있다. 선군시대가 시작되면서 북한은 경제발전 전략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선군경제 발전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선군정치가 군 중시 정치든, 군 중심 정치든, 그것의 경제적 의미는 군수경제, ‘국방공업’을 전략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 이른바 선군경제노선이다.³ 북한에서 선군경제 노선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은 2002년 9월이다.⁴ 선군시대 경제 전략은

² 황해남도 사리원에 소재하는 해군사령부 소속의 조선인민군 214 부대 포병중대.

³ 임수호, “김정일 정권 10년의 대내 경제정책 평가: ‘선군 경제노선’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수출입은행, 2009), p. 23.

⁴ 『조선신보』, 2004년 4월 11일.

군수경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수경제의 핵심은 국방공업이다. 선군 경제 노선은 ‘국방공업을 우선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 발전’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⁵ 국방공업에 힘을 불어넣는 것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길이라고 주장한다. “국방공업을 떠나서는 나라와 인민의 안녕도 생각할 수 없고 경제 강국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⁶

과거 김일성 시대에도 중공업 제일주의를 내세워 경공업과 농업의 잉여를 약탈했듯이, 선군경제 역시 국방공업우선주의에 대한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선군경제 발전전략은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다른 부문들을 희생해서라도 국방공업 발전을 우선시 하겠다는 의미이다.⁷

국방공업은 강성대국 건설의 생명선이며,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선군시대의 근본적인 경제원리라고 보는 것이다.⁸ 이는 “국가의 경제투자에서 국방공업의 몫을 먼저 조성하고 노력, 설비, 자재, 전력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 보장”해야 하며,⁹ “계획지표 선정에서 민수생산지표보다 군수생산지표를 더 중시”해야 한다¹⁰는 논리로 귀결된다.

선군정치를 기저로 삼는 북한은 국가 예산 가운데 국방부문에 대한 자금수요가 매우 높은 편이다. 북한 내각 총리를 지낸 홍성남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는 국가예산 자금수요 변동의 가장 큰 특징으로 “국방부문에 대한 자금수요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군정치는 혁명과 건설을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풀어 나가며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¹¹

⁵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활로를 열어주신 불멸의 공헌,” 『경제연구』, 1호 (사회과학원, 2004).

⁶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 로선,” 『경제연구』, 2호 (사회과학원, 2003).

⁷ 선군시대에는 군사가 첫째이고 국방공업이 선차이며 국방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다. 김봉호, 『선군으로 위력 떨치는 강국』 (평양출판사, 2005), p.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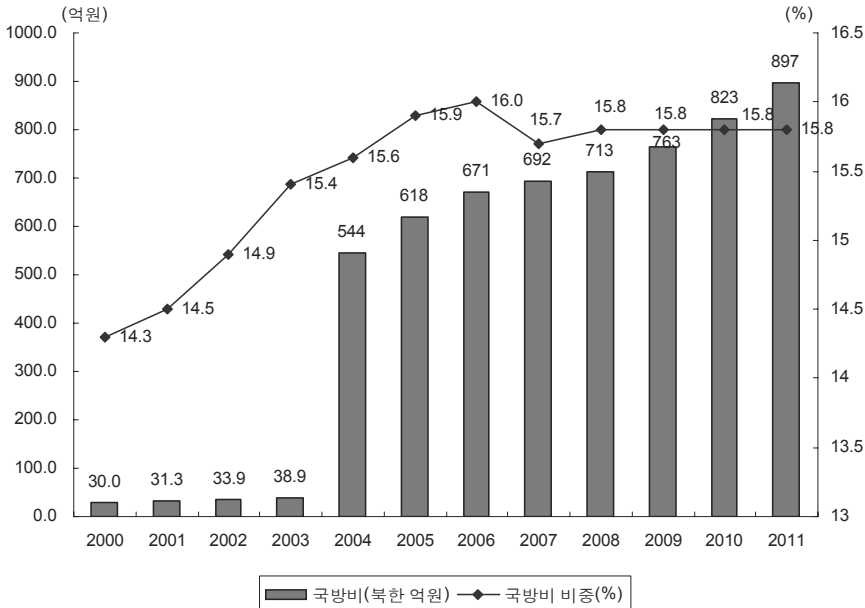
⁸ 조동호, “북한 공진화 전략 연구: 경제,” EAI 북한 공진화전략 연구패널 보고서 No. 4 (2010), p. 6.

⁹ 리기성, 위의 글.

¹⁰ 김재서, “선군원칙을 구현한 사회주의경제관리,” 『경제연구』, 1호 (사회과학원, 2004).

¹¹ 홍성남, “현 시기 국가예산자금에 대한 수요변동의 중요 특징,” 『경제연구』, 2호 (사회과학원, 2005); 『연합뉴스』, 2005년 7월 2일 참조.

<그림 1> 북한의 국방비 비중 추이



자료: 북한 최고인민회의.

북한은 후계구도 구축을 위해 선군 정치를 내세워 국방공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은 15%대를 유지하고 있지만,¹² 실제 국방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추정이다.¹³ 북한 경제에서 군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으나 대체로 전체 경제의 30~5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⁴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수경제 비중이 60%대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군경제 노선 하에서는 중공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방공업에 복무하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그리고 전자공업과 정보산업을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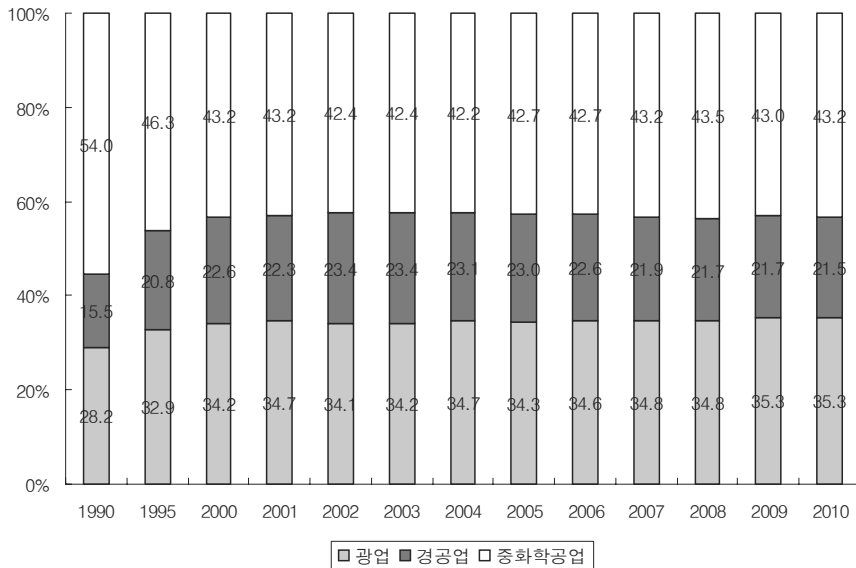
¹² 스웨덴의 민간 연구소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2011년 국방비 자료’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해 북한 돈으로 9백억원을 국방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국방비를 공개하지 않은 채 전년도 대비 증가율만 발표하고 있는데, 2011년에 총 예산지출 증가율은 8.9%였고, 이 가운데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8% 라고 했다.

¹³ 북한의 공식 국방비에는 병력 및 장비와 시설의 운영 유지비만 포함되고 여타 군수공업 투자비나 무기획득비 등은 인민경제비나 사회문화시책비 등에 은닉된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¹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2008), p. 129.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를 앞세워나가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필수적 요구로 보고 있다.¹⁵ 이로 인해 북한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비중이 가장 높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광공업에서 중화학공업과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80%에 이르고 경공업은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림 2> 북한의 광공업 구성비 추이



자료: 통계청.

하지만, 북한은 선군경제 노선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선군경제 발전 전략은 일시적으로 반짝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시현상일 뿐이다. 실제로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군수경제에 대한 투자 집중이 오히려 일반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국방공업의 우선발전을 통해서 일반경제를 동시 발전시킨다는 전략 자체가 북한 경제의 실정상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 가장 설득력 있다. 북한에서 국방공업과 일반경제는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되어 있으며, 잉여의 이전은 일반경제로부터 국방공업으

¹⁵ 김덕호,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를 앞세워 나가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2호 (사회과학원, 2004).

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¹⁶

그러므로 북한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국방공업으로 집중하는 경우 소비재 생산은 뒷전으로 밀리고 인민생활의 향상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오늘날 북한경제가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선군경제 전략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과 자원을 국방공업에 우선 배분함으로써 일반 경제는 갈수록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선군경제건설 노선은 군사·경제 병진 노선하에서의 산업정책을 더욱 왜곡된 방향으로 발전시킨 경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¹⁷ 앞으로 김정은 체제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가 바로 이러한 경제문제이다

2. 북한의 경제상황 진단과 과제

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선군경제시대에 북한의 군이 경제 사업에 주도하거나 깊숙이 간여하는 행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방위원회가 조선대풍국제그룹을 조직하여 외자유치를 주도하고, 나선특구 개발 사업을 강성무역 등 군부 산하 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특히 대남 경제협력에서 군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금강산 사업 등에 있어서 주도적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의 국방공업을 앞세운 경공업과 농업 동시 발전 전략은 자원의 한계 및 비효율성, 산업연관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군수산업 비중이 너무 큰 경제구조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군수경제가 발전할수록 북한 경제는 더욱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선군경제시대의 북한 경제는 일시적인 성장률 하락이 아니라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의 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09년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는데, 선군정치를 유지하는 한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은 계속 될 것이다. 현재 추세라면 1990~98년까지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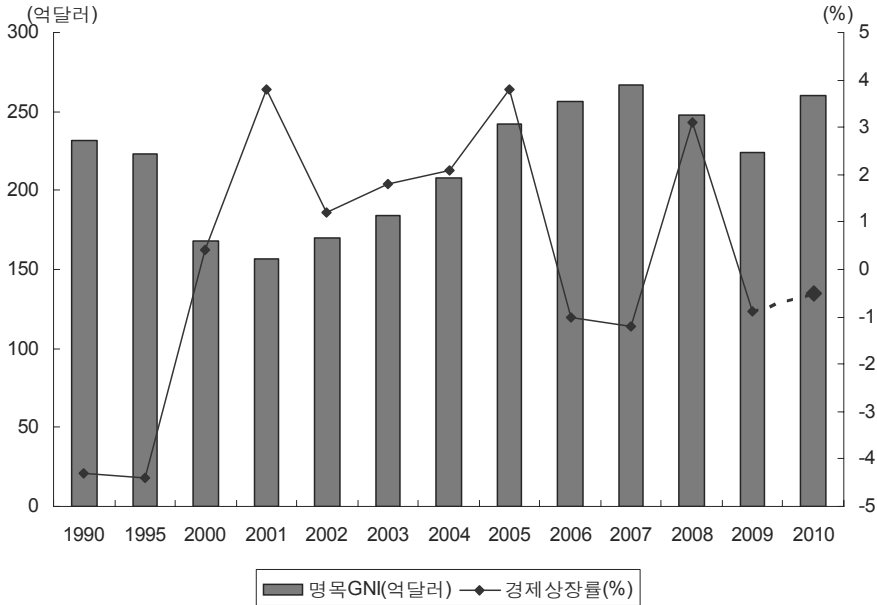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장기적인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대내외

¹⁶ 구체적인 내용은 차문석, “선군시대 경제노선의 형성과 좌표,”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2009) 참조.

¹⁷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2012), p. 139.

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산업가동률 저하,¹⁸ 원부자재난과 전력 부족 등에 의한 제조업 침체, 시장통제로 인한 서비스업의 부진 등을 들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북지원 감소, 외자유치 불투명 등에 기인하고 있다.

<그림 3> 북한의 경제규모 및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북한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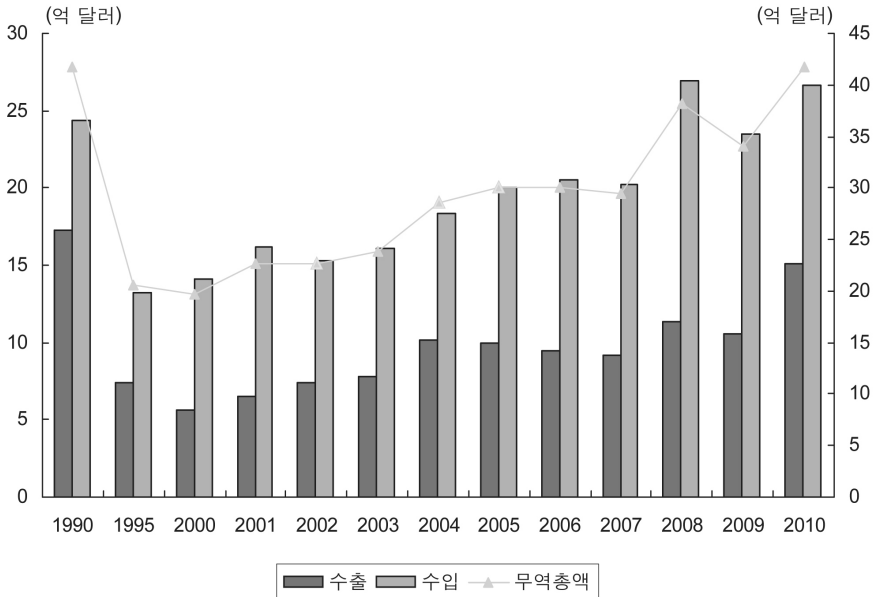
나. 불균형적 무역구조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 심화로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던 무역이 최근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대중무역 확대로 다시 증가하는 기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34.1억 달러(남북교역액 제외)로 전년보다 10.6%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6.0%와 12.5%가 감소한 10.6억 달러와 23.5억 달러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무역규모 41.7억 달러로 다소 증가했지만 무역수지는 여전히 11.5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¹⁸ 어려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군수공장의 가동률은 60%대로 증가한 반면, 근로자들의 개인 벌이와 시장통제를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공장의 생산성이 30% 이상 감소하고, 공장 단위에서는 원자재 부족으로 가동률이 30%대에서 20%대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북한은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원자재 및 물품, 그리고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등으로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산업이 가동되고 주민들의 식량난 및 생필품난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규모가 커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이 북한 경제를 그나마 지탱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그림 4> 북한의 수출입 추이



자료: KOTRA.

최근 들어 북한은 대(對)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있지만,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생필품 수입과 건설자재 등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은 후진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은 찾기 어렵다. 장기적인 수출증대를 모색하기 보다는 외화 획득을 위해 단기적으로 구득 가능한 광물과 수산물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 | 수출 | 수입 | 합계 | 무역수지 |
|------|-------|-------|-------|--------|
| 2006 | 468 | 1,232 | 1,700 | -764 |
| 2007 | 582 | 1,392 | 1,974 | -811 |
| 2008 | 754 | 2,033 | 2,787 | -1,279 |
| 2009 | 793 | 1,888 | 2,681 | -1,095 |
| 2010 | 1,188 | 2,278 | 3,466 | -1,090 |
| 2011 | 2,461 | 3,165 | 5,626 | -7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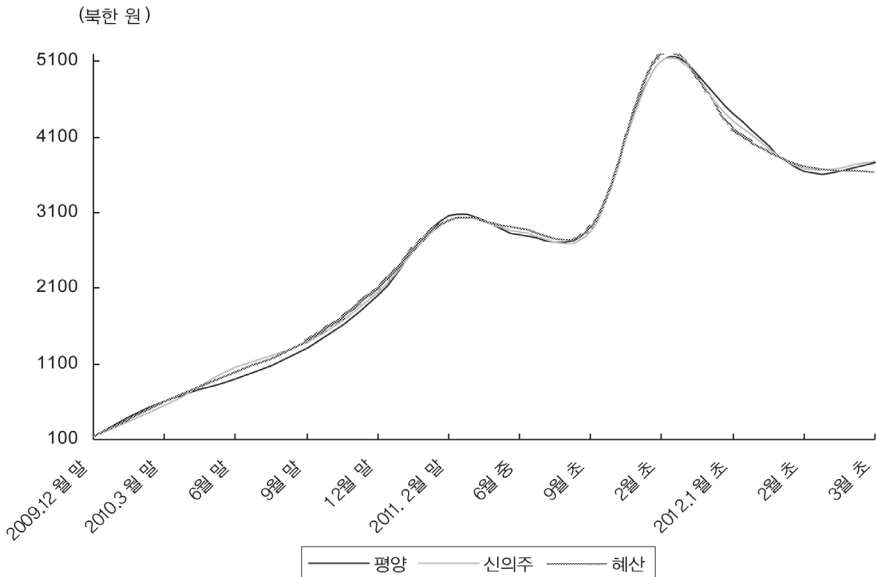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다. 환율시장 불안정 확산

환율과 물가 불안 등으로 주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화폐개혁 이후 불안정 했던 환율이 안정을 찾아가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10배 이상 폭등하는 등 더욱더 요동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불안정한 환율등락이 거듭돼 주민생활 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12월 28일 인민보안성에서 외화거래 금지포고문을 발표하자 1달러에 신권 기준 35원 수준이던 시장 환율이 4배가량 뛰어 130원대에 형성되었다. 장마당 통제가 해제된 후(2010.2.1) 잠시 주춤했던 환율이 다시 급상승세를 보여 2012년 초에는 5,000원을 넘기도 했으며, 3월초에는 1달러에 3000원 대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북한의 시장환율

(단위: 1달러=북한 원)



자료: 데일리NK, 『북 장마당 동향』.

환율급등은 외화부족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 화폐의 신용도 및 가치 하락으로 외화 선호도가 높아진 현상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암시장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을 비롯, 부인 등 가족들이 북한 현지인이 형성한 장마당에서 불법으로 환전을 하고 쇼핑도 즐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⁹ 환율 불안에다 상품수급 불균형 심화로 북한의 시장가격은 급등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라. 물가폭등에 의한 주민생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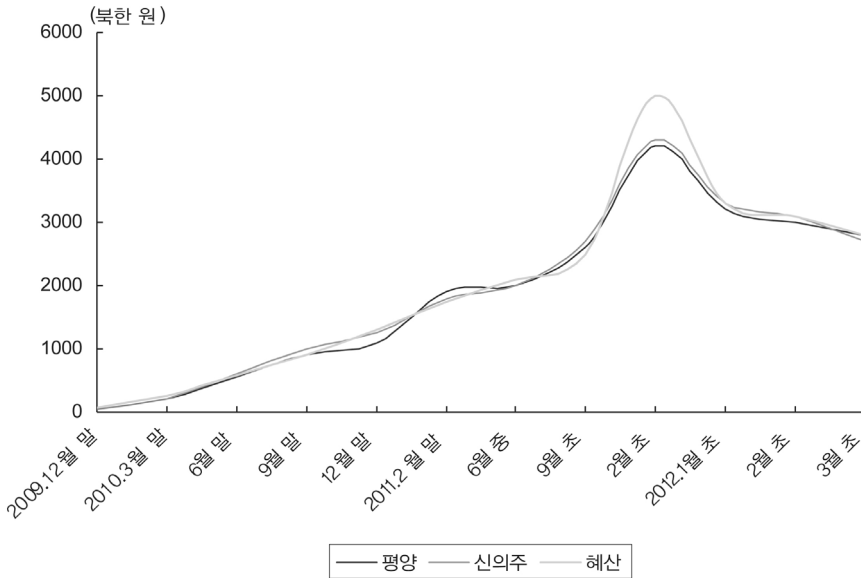
북한의 시장가격은 동종 상품의 대외수입 가격에 환율 및 일정한 이윤을 적용한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북한 환율의 급변이 시장가격 자체에 그대로 반영되어 급등락을 거듭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시장 가격이 급등락 하는 동안에는 그에 상응하여 시장거래 자체도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시장가격의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돈주들은 물건 사재기로 폭리를 노리면서 긴급수요를 발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시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상인들은 급격한 가격변화를 예

¹⁹ 『자유아시아방송(RFA)』, 2012년 5월 26일.

상하기 때문에 공급을 급격히 축소하고 있다.

북한의 상품가격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되는 것은 쌀 가격인데, 최근 들어 쌀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실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쌀 가격은 이보다 더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량의 절대량 부족 및 가격 불안정으로 상거래가 위축되어 식량 가격 역시 급 상승세를 보여 2012년 3월초 기준, 1kg당 3000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림 6> 북한의 쌀값 동향(kg당)



자료: 데일리NK, 「북 장마당 동향」.

북한 노동자의 한달 급여(3~4천 원)로 쌀 1~2kg밖에 살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화폐개혁 이전 수준만큼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물가난에 시달리면서 생활경제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편 북한의 식량은 생산방식의 문제, 비료, 농자재 부족, 관개시설 취약 등 구조적인 문제로 만성적인 부족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료의 경우 수요량은 150만 톤 정도지만, 생산량은 겨우 45만 톤에 불과하여 매년 100만 톤 정도 부족(과거에는 한국에서 30만 톤 정도 지원)한 실정이다. 북한의 식량은 수요에 비해 생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매년 100만 톤 정도 부족²⁰해 왔다.

²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은 북한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10만 톤의 식량이 부족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 및 수입 등으로 약 50~100만 톤 내외를 확보하면서 식량난을 겨우 극복해 왔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국제사회의 지원중단,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 달러 부족에 의한 수입 감소 등으로 식량난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50년 만의 심한 가뭄현상으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받고 있어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해안지대와 북부고산지대를 제외한 전반적 지역에 40%의 농경지가 가뭄피해를 받고 있다.²¹ 특히 황해남도 강령, 옹진 지방과 수양산이북지대를 비롯한 서해안중부지대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에 전군중적 운동 전개하고 있다.²²

<표 2>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단위: 만 톤)

| | 수요량 | 전년도 생산량 | 부족량 |
|------|---------|---------|--------|
| 1995 | 534 | 413 | 121 |
| 2000 | 518 | 422 | 96 |
| 2001 | 524 | 359 | 165 |
| 2002 | 536 | 395 | 141 |
| 2003 | 542 | 413 | 129 |
| 2004 | 548 | 425 | 123 |
| 2005 | 545 | 431 | 114 |
| 2006 | 560 | 454 | 106 |
| 2007 | 543 | 448 | 95 |
| 2008 | 540 | 401 | 139 |
| 2009 | 548 | 431 | 117 |
| 2010 | 460~540 | 411 | 50~130 |

자료: 농촌진흥청.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을 70

할 것으로 예상.

²¹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강냉이 평당 2~3포기가 말라죽었고 그렇지 않은 강냉이포기들은 시들어서 생육이 정지되는 등 그 피해면적이 수만 정보나 되고 있다. 채소와 공예작물을 비롯한 다른 밭작물의 피해면적도 대단히 심각하다고 한다. 『노동신문』, 2012년 5월 25일.

²² 『노동신문』, 2012년 5월 25일.

여만 톤으로 추산한다. 새 지도자 김정은에게 식량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FAO는 북한에서 식량 70만 톤이 부족하면 주민 6백만여 명이 굶주릴 수 있다고 추산한다.²³

극심한 식량난 등 북한의 경제상황 악화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이 급증하는 등 인도적 위기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약 700만 명²⁴ 정도가 식량난과 질병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며, 그 중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일반 노동자 및 농민 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의 배급정책상 고급간부와 그 가족, 군수공업 종사자들에게 우선 배급되어 일반 노동자와 주민은 재대로 배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 수십 만 명에서 최대 수백 만 명까지 추산되는 아사자는 북한경제위기 실상의 징표이며, 아사위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²⁵ 북한은 2012년 경제 분야 강성대국 진입을 선언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주민들의 경제적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간부와 주민 그리고 계층간 및 평양-지방간의 양극화 심화는 새로운 사회갈등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해결해야 할 경제적 과제는 만만치 않다. 선군경제발전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 김정은 체제는 유혼통치시스템 하에서 정책을 추진하되, 일정 시점 이후에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김정일 시대와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새 리더가 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식기반경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단행한 경제개혁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²⁶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2012년 1월 조선노동당 간부들에게 북한 최대의 터부 가운데 하나인 자본주의적 방식의 도입을 포함한 경제 개혁 논의를 촉구했다²⁷고 한다.

²³ 『노컷뉴스』, 2012년 2월 28일.

²⁴ 북한의 배급이 거의 안되는 일반노동자와 주민(약 600만 명)과 농민(800만 명)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취약계층으로 간주.

²⁵ 조한범, “김정은 정권 권력재편과 위기요인 진단,” (Online Series Co 12-23, 2012.5.11).

²⁶ 『연합뉴스』, 2012년 1월 18일.

²⁷ 北朝鮮問題取材班, “北朝鮮: 金第一書記 資本主義論議お容認, 一月の發言録,” 『毎日新聞』, 2012년 4월 16일; 『연합뉴스』, 2012년 4월 16일 재인용.

III.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변화

1. 김정은 체제의 경제적 관심 분야

가.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경제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해 보고자 한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자료의 제약 등으로 이를 분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논리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북한의 대표적인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활용하여 북한의 의도와 방향을 1차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즉,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경제 분야 기사 건수 및 내용 분석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방향을 개략적으로 추론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북한 노동당이 365일 연중무휴 발간하는 신문으로서 북한 주민들의 정치·사상 학습의 주요 교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북한 당국의 정책 방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정책 변화를 보려면 언제부터 볼 것인가에 대한 시점 선정도 중요하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된 2009년 초부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로 설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김정일 사망 이후로 할 것인지 등 시각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본고에서는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김정일 사망 이후를 공식적인 김정은 체제로 설정하고, 2012년 1월부터 3월말까지 노동신문에 등장한 경제 분야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여기에서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노동신문 기사에서 경제 분야가 차지하는 건수와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상대적으로 경제 분야 관심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경제 분야 기사 건수 증가 추이를 통해 경제 분야를 점차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경제 분야 기사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의 어느 부분에 관심과 중점을 두고자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 분야 항목을 15가지로 구분하고, 해당 경제 분야 핵심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류하였다. 농업, 음식료품, 경공업, 광물, 건설, 기계, 금속, 전력, 화학, 철도, 상업·유통, 전자, 과학, 기술, 기업소로 분류하였다. 핵심어는 해당 분야에서 많이 언급된 부문으로 정리하였다. 농업부문에서 농장, 농촌, 축산, 임업, 과수, 식량 등으로 나타났다. 경공업 부문은 피복, 양말, 일용품, 신발, 화장품 등이며, 건설부문

은 간석지, 도시건설, 주택, 도로, 공원, 수로, 봉사소, 전시관 등이다. 기계 부문은 CNC공작기계, 용접기, 연하기계, 광업기계, 전동기, 설비, 기계부품 등이다. 전력은 발전소, 송전, 화력발전, 수력발전, 전력공업이다. 인민생활과 경제부흥 기사는 기업소 부문에 포함시켰다.

<표 3> 노동신문의 경제관련 항목 분류

| 구분 | 핵심어(key-words) |
|-------|---|
| 농업 | 농장, 농촌, 축산, 수산, 임업, 과수, 식량증산, 농기계, 농기구 |
| 음식품 | 식량, 감자국수, 기초식품, 식료가공 |
| 경공업 | 피복, 양말, 일용품, 신발, 화장품 |
| 광물 | 탄광, 석탄, 석재, 광업기업소 |
| 건설 | 간석지, 공원, 유희장 도시건설, 도로, 수로, 봉사소, 주택, 전시관 |
| 기계 | CNC공작기계, 용접기, 연하기계, 광업기계, 전동기, 설비, 기계부품 |
| 금속 | 금속, 강철, 제강 |
| 전력 | 발전소, 송전, 화력발전, 수력발전, 전력공업 |
| 화학 | 화학, 비료, 흙비료, 유기질, 제약, 화학공업 |
| 철도 | 기관차, 철로 |
| 상업·유통 | 상업, 유통, 백화점, 상품전시회, 광복지구상업 |
| 전자 | 전자공업, TV수상기 |
| 과학 | 태양열, 개량, 유기농법 |
| 기술 | 선진과학기술, 기술재건, 기술추동 |
| 기업소 | 공장, 기업소, 영웅기업소, 연합기업소, 인민생활, 경제부흥 |

나. 분석 결과

201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동신문 전체 기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혁명활동, 조국통일 등 7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최다빈도를 기록한 기사는 정치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분야는 전체 기사 3,541건 가운데 833건으로 23.5%를 차지하였다. 이는 김정일 조문정국과 김일성 탄생 100주년 행사, 김정은 3대 세습 공고화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 분야가 685건으로 19.3%를 차지하여 2위를 기록하였다. 경제 분야는 540건, 15.2%를 차지했다. 김

정일 시대의 같은 동기에 비해서는 경제 및 국제 분야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경제와 대외관계를 중시하려는 하나의 변화로 볼 수 있다.

<표 4> 노동신문 분야별 기사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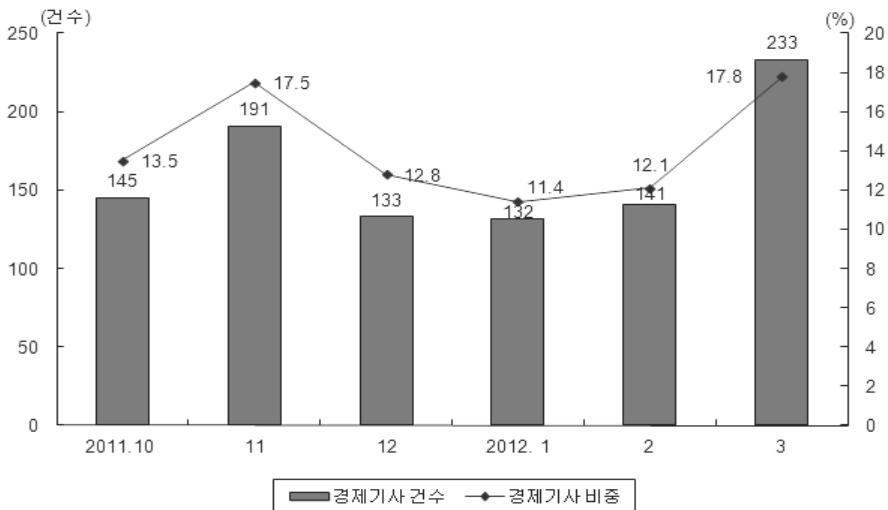
(단위: 건, %)

| |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국제 | 혁명활동 | 통일 | 합계 |
|--------------------------|-------------|---------------|---------------|---------------|---------------|---------------|-------------|---------------|------------------|
| 김정은시대 (‘12.1.1~3. 31) | 건수 (구성비) | 833 (23.5) | 540 (15.2) | 455 (12.8) | 357 (10.1) | 685 (19.3) | 32 (0.9) | 639 (18.0) | 3,541 (100.0) |
| | 순위 | ① | ④ | ⑤ | ⑥ | ② | ⑦ | ③ | |
| 김정일시대 (‘11.1.1~3.31) | 건수 (구성비) | 831 (25.7) | 439 (13.6) | 495 (15.3) | 365 (11.3) | 510 (15.8) | 50 (1.5) | 539 (16.7) | 3,229 (100.0) |

자료: 노동신문 기사 분석 결과 정리.

경제 분야 기사 건수는 정치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전체기사에서 경제 분야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월별 추이로 보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2012년 1월 132건 11.4%, 2월 141건 12.1%, 3월 233건 17.8%로 증가했다. 이는 김정은 체제는 경제 분야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7> 노동신문 경제 분야별 기사 건수 및 비중



자료: 노동신문 기사 분석 결과 정리.

노동신문 경제 분야 기사 540개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것은 농업으로 151건 28%나 차지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농업에 중점을 두면서 식량문제를 조금이라도 풀어 보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경공업으로 65건 12%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생활필수품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광물도 60건에 11.1%나 차지하여 북한이 외화확보를 위해 수출 가치가 높은 광물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건설 분야 기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것은 북한이 평양 현대화 사업을 위해 주택 및 도로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기계 및 금속은 북한이 군수공업 발전을 위한 전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산업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항만 등에 대한 기사 건수도 높게 나타나, 향후 김정은 체제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김정은시대는 김정일시대와 비교하여 농업, 경공업, 광물, 건설, 전력, 철도·항만 등에서 기사 건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 이들 분야를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노동신문 경제 분야 항목별 기사 건수 및 비중

(단위 : 건, %)

| 구 분 | 김정은시대 (*12.1.1~3.31) | 김정일시대 (*11.1.1~3.31) |
|-----|-------------------------|-------------------------|
| | 빈도(구성비) | 빈도(구성비) |
| 농업 | 151(28.0) | 102(23.2) |
| 음식품 | 25(4.6) | 53(12.1) |
| 경공업 | 65(12.0) | 48(10.9) |
| 광물 | 60(11.1) | 47(10.7) |
| 건설 | 59(10.9) | 41(9.3) |
| 기계 | 44(8.1) | 36(8.2) |
| 금속 | 24(4.4) | 23(5.2) |
| 전력 | 37(6.9) | 27(6.2) |
| 화학 | 20(3.7) | 6(1.4) |
| 철도 | 15(2.8) | 10(2.3) |
| 항만 | 12(2.2) | 6(1.4) |

| 구 분 | 김정은시대 (*12.1.1~3.31) | 김정일시대 (*11.1.1~3.31) |
|-------|-------------------------|-------------------------|
| | 빈도(구성비) | 빈도(구성비) |
| 상업·유통 | 4(0.7) | 2(0.5) |
| 전자 | 2(0.4) | 6(1.4) |
| 과학 | 11(2.0) | 7(1.5) |
| 기술 | 8(1.5) | 15(3.4) |
| 기업소 | 3(0.6) | 10(2.3) |
| 합계 | 540(100.0) | 439(100.0) |

자료: 노동신문 기사 분석 정리.

김정은 시대의 경제 분야 항목별 기사 가운데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농업과 경공업 그리고 광물, 건설 분야를 더욱 세분화하여 분석한 특징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 분야의 경우 151개 기사를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서 보면, 농장에 관한 기사가 31건으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이는 실적이 뛰어난 협동농장에 대한 소개와 관심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농산물 증산, 축산, 농촌 등의 순으로 많이 나왔다.

<표 6> 농업 분야의 세부항목

| 구분 | 빈도 | 비중(%) |
|----|-----|-------|
| 농장 | 31 | 20.5 |
| 농촌 | 23 | 15.2 |
| 축산 | 26 | 17.2 |
| 임업 | 15 | 9.9 |
| 과수 | 21 | 13.9 |
| 증산 | 27 | 17.9 |
| 기타 | 8 | 5.3 |
| 합계 | 151 | 100.0 |

자료: 노동신문 기사 분석 정리.

경공업 분야는 전체 65건 가운데 피복이 28건 43.1%로 가장 많이 나와서, 주민들의 입는 문제 해결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일용품은 16건

24.6%, 신발은 11건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민생활 향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경공업 분야의 세부항목

| 구분 | 빈도 | 비중(%) |
|-----|----|-------|
| 피복 | 28 | 43.1 |
| 일용품 | 16 | 24.6 |
| 신발 | 11 | 16.9 |
| 양말 | 9 | 13.8 |
| 화장품 | 5 | 7.7 |
| 기타 | 3 | 4.6 |
| 합계 | 65 | 100.0 |

자료: 노동신문 기사 분석 정리.

광물 분야는 전체 60건 가운데 탄광에 대한 기사가 28건 46.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최근 들어 광물 채굴에 적극 나서면서 각 탄광의 생산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 역시 북한의 대표적인 광물로서 채굴 생산을 높여 중국에 적극 수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표 8> 광물 분야의 세부항목

| 구분 | 빈도 | 비중(%) |
|-------|----|-------|
| 탄광 | 28 | 46.7 |
| 석탄 | 16 | 26.7 |
| 석재 | 7 | 11.7 |
| 광업기업소 | 5 | 8.3 |
| 기타 | 4 | 6.7 |
| 합계 | 60 | 100.0 |

자료: 노동신문 기사 분석 정리.

건설 분야는 전체 59건 가운데, 도시건설이 12건 20.3%로 가장 높고, 주택도 11.9%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양 현대화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간석지 개발, 수로 건설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 중국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통해 항만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항만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다.

<표 9> 건설 분야의 세부항목

| 구 분 | 빈도 | 비중(%) |
|------|----|-------|
| 간석지 | 7 | 11.9 |
| 공원 | 3 | 5.1 |
| 도로 | 5 | 8.5 |
| 도시건설 | 12 | 20.3 |
| 봉사소 | 3 | 5.1 |
| 수로 | 8 | 13.6 |
| 전시관 | 5 | 8.5 |
| 주택 | 7 | 11.9 |
| 항만 | 6 | 10.2 |
| 기타 | 3 | 5.1 |
| 합계 | 59 | 100.0 |

자료: 노동신문 기사 분석 정리.

2.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전망

북한은 강성국가 진입 목표 자체도 중요하나, 체제 유지와 인민들의 영도를 위해선 근본적인 경제난 해결과 중장기 비전 제시가 절대 필요하다. 2011년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총 143회로 경제 59회(41.3%), 군사 39회(27.3%), 대외 16회(11.2%), 기타 29회(20.3%)로 경제 부문에 치중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재 북한 경제 상황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단기적으로 극심한 식량난, ‘고난의 행군’과 같은 곤란의 재발, 혹은 북한정권과 김정은이 중·장기적으로 업적을 남지 못하거나, 현실적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통치의 정통성은 위협에 빠질 수 있다.²⁸

²⁸ 박형중·조한범·장용석,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09), pp. 180~181; 이교덕, “김정은 체제와 2012년,” 『KDI북한경제리뷰』, 1월호 (KDI, 2012), p. 34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는 확고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김정은 정권의 북한 경제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우선 국방위원회가 2011년 12월 30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서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김정은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도 김정일 시대의 국가생존전략이었던 선군노선을 계승해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음을 볼 때, 단기적으로 북한의 경제정책은 기존의 정책노선들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공업 분야에 우선 투자를 지속하면서 시장활용 정책과 시장통제정책을 지그재그로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은 현상적으로는 시장통제정책을 지속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시장을 묵인·활용하는 정책을 시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²⁹

김정일 시대가 선군경제 발전 전략을 추구했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내세워 경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아직 정치적 기반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군정치를 등한시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자력갱생으로 경제난을 돌파할 수도 없다. 김정은 체제에서 내각을 비롯한 경제 담당 조직들은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해외공관과 내각 등에 “경제적 성과 없는 정치외교는 의미가 없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권력 승계 이후 북한의 경제운영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전망된다. 김정은 지도부가 기존 정권과 같이 선군경제 운영을 고집하는 경우 민생난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 선군경제 운영을 유지 혹은 점진적으로 포기하는 중에 개혁개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북한체제운영의 특성상 선군경제운영과 개혁개방은 대립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은 피포위의식(*under siege consciousness*) 속에 선군경제운영이 개혁개방에 따른 체제위험을 최소화할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핵과 개혁개방을 바꾸려 하지 않으려는 조건에서 선군경제운영을 포기한 채 개혁개방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³⁰ 따라서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은 선군경제발전 전략을 기저로 유지하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는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경제발전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 강국은 “주체적 입장에 튼튼히 선 자립적 민족경제, 최첨단 과학기술의

²⁹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북한이해』, p. 175.

³⁰ 김병욱, “김정은 권력승계 이후 선군경제운영과 국제사회 변화 동향,” 『KDI북한경제리뷰』 (2012년 2월), pp. 84~85.

끊임없는 발전에 의거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고도로 현대화된 경제,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참답게 보장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경제를 가진 강국”라고 정의하고 있다.³¹ 이를 위한 실질적 과제로 자립성과 주체성이 철저히 보장된 민족경제의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자력갱생과 폐쇄경제가 다르다 점을 강조한다.³² 최근 들어 ‘새 세기 산업혁명’과 ‘지식경제’를 강조하면서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고 있다.

“오늘의 산업혁명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지식과 경제의 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우리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운영되고 발전하는 현대화된 지식산업으로, 사회주의 지식경제로 일신시키기 위한 경제 분야에서의 일대 변혁이다.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가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면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갈 때 경제건설에서는 놀라운 대비약이 일어나고 우리 조국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될 것이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우리 당의 과학적인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준비되고 추진되어 온 우리 경제발전의 새로운 변화과정이다.”³³

“지금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의 시대이다. 낮은 경제시대와 결별하면서 지식경제화의 새로운 높이에 올라선 것이다. 지식경제는 불과 10년 동안에 수백년 동안 마련한 물질적 부보다 더 많은 재부를 창조하게 하고 있다. 기초과학의 발전과 함께 정보기술과 고도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놀라운 사회경제적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³⁴

북한이 새로운 경제구호를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김정은 체제는 경제 분야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정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선군’ 논리 하에서 경공업 및 농업 병행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선군경제 발전 전략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군경제 노선을 견지하되, 부분적인 변화는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새 리더가 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식기반경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단행한 경제개혁 사례들을 검

³¹ 『경제연구』 (사회과학원, 2011), p. 2.

³² 홍익표, “김정은 체제의 북한, ‘경제강국 건설’의 전략과 과제,” (평화재단 52차 전문가 포럼, 2012), p. 7.

³³ 『노동신문』, 2012년 12월 17일.

³⁴ 『노동신문』, 2011년 11월 10일.

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체적인 맥락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의 정책을 일단 계승하면서 경제개혁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³⁵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미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운 CNC(컴퓨터제어기술)을 중심으로 첨단화, 과학화,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역점을 둘 것이다. 외자 유치와 인민생활 향상을 내세운 제한적인 개혁·개방 확대 추진이 예상된다.³⁶

<표 10> 김정은 체제의 유훈통치 정책 전망

| | 주요 방향 | 세부 내용 |
|----|----------------------|---|
| 정치 | 선군정치 | - 군과 당 중심의 권력 구조 유지(당 중앙군사위원장 취임) |
| 경제 | 강성대국 진입 | - 외자유치·북중경협 확대(황금평, 나진 개발 등) - 경제특구 추가 확대 -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이행 · 농업, 에너지, 물류단지, 철도·도로 등 SOC 확충 - 인민생활 향상, 과학기술 발전, 평양 10만호 건설 등 - 자립민족경제 건설(철·비료·섬유의 주체생산체계 구축) |
| 북핵 | 한반도 비핵화 | - 6자회담 및 비핵화 노력 재개 - 평화적 핵개발 이용 주장 (경수로 건설 요구) |
| 대외 | 실리 균형 외교 | - 북중 관계 강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 중·러와 줄달리기의 실리 외교 추구 |
| 대남 | 평화협정 체결 남북공동선언 이행 | - 주도권 우위 경쟁 속에 남북 경색 해소 노력 - 남북경협 확대로 민족사업 발전(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 |

자료: 홍순직, “포스트 김정일 시대 개막: 2012년 유훈통치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1.12.

한마디로 김정은 체제는 선군경제 노선하에서 제한적인 경제개혁 전략을 추진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띠는 것이다. 김정은의 경제정책은 그의 첫 번째 노작이라고 하는 “4.6 노작”에 보다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4.6 노작”은 4.15 열병식 연설보다 앞서 4월 6일 날 행해졌지만 4월 19일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되었다.³⁷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4월 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³⁸

³⁵ 『연합뉴스』, 2012년 1월 18일.

³⁶ 홍순직, “포스트 김정일 시대 개막: 2012년 유훈통치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1.12).

³⁷ 박형중, “김정은 정권은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가?,” (Online Series Co 12-21, 2012.5.4).

³⁸ 『노동신문』, 2012년 4월 19일.

“선군시대 경제건설 노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나라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 우리는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우리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식량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전력·석탄·금속·철도운수 부문을 앞세워야 인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킬 수 있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특히 전력공업부문에 큰 힘을 넣어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우리나라를 지식경제 강국으로 일떠세워야 한다.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철저히 내각과 합의하여 풀어나가며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내각의 결정, 지시를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국토관리사업과 관련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노작에서는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고 살림집, 도로 건설, 토지정리, 물 관리, 산림 조성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³⁹ 향후 인민생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외자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역량을 총집중하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높이 경제 강국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⁴⁰ 특히 대외경제 협력에 적극 나설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외경제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 것은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수출품생산기지들을 전망성 있게 꾸리고 경제무역시대 개발과 합영·합작을 활발히 전개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조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지난 2011년 초에 발표한 10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개발 계획을 국가경제의 혁신적 발전 기여에 두고 있다.⁴¹ 해외 선진기술 도입(Advanced Technology), 과학적인 경영관리 기법(Scientific Management), 해외투자자본(Capital Investment)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경제개발의 방향은 자원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측면, 철

³⁹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4.27), 『노동신문』, 2012년 5월 9일.

⁴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00(2011)년 사업정형과 주체101(2012)년 과업에 대하여,” 『노동신문』, 2012년 4월 14일.

⁴¹ 임강택·조봉현 외, 『북한 경제개발 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0), pp. 189~193.

도·도로·항만 등 인프라(SOC)개발 측면, 금융 및 외자유치 등 3대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2011년 초에 자원개발, 하부구조, 기초산업단지, 농수축산, 토지개발 등에 1,000억 달러 투자하는 10년 경제건설계획을 확정했다.⁴² 농업,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지하자원 개발 등 크게 12대 개발 분야를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반농업개발, 8대 공업지구 조성,⁴³ 국가개발은행 설립, 석유에너지 개발, 2,000만 톤 원유가공, 3,000만kW 전력 확보, 2000만 톤 제철 생산, 지하자원 개발, 3,000km 고속도로 건설, 2,600km 철도 현대화, 공항·항만 건설, 토지개발 및 도시건설 등이다.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재정성의 국가투자담보서 제공, 세금 규정 중 가장 유리한 우대조건 및 특혜조건 보장, 기업 활동 관련자의 자유로운 입출국 보장, 외화의 입출금 및 대외송금 자유보장,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적인 편의 및 담보제공, 기업관계자의 개인 소득세 20년 간 면제, 수출입 업무 수행 보장, 생산·경영·재정·인사 등 기업 활동에 대한 독자적 의사결정, 분쟁조정을 위한 국제무역중재 기구 조직, 능력별 인사관리 등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방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였다. 비상설 기구로 국가경제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적인 외자유치 업무는 합영투자위원회(2010년 7월 설립)와 조선대풍국제그룹⁴⁴이 맡는다. 그런데 대풍그룹이 실적이 저조하자 합영투자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흡수되었으며, 업무는 금강산 등 관광사업, 나선특구 기업 유치, 외자 유치 일부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이 시점에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발표한 것은 경제난 해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Roadmap)을 주민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정

⁴² 북한은 2011. 1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기구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경제개발총국은 “국가경제개발 전략대상들을 실행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총괄하는 정부적 기구”라고 전했다. “내각은 국가경제개발 전략계획에 속하는 주요 대상들을 전적으로 맡아 실행할 것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따라 하부구조 건설과 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 등 기초공업, 지역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경제개발의 전략적 목표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2011년 1월 15일.

⁴³ 나선, 신의주, 원산, 청진, 김책, 함흥, 남포, 평양.

⁴⁴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장 전일춘, 총재 박철수, 대외경제협력기관,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투자유치 및 자금원천을 보장하는 경제연합체로 활동하고 있다. 총재 아래 전략기획실·재정융자부·자원산업부·대외법률사업부·종합관리부·수출입부 등 6개 부서가 있으며, 이 중 재정융자부는 은행 융자와 국제 금융을, 자원산업부는 지하자원 개발과 철도·도로·항만·공항 등 SOC 투자를, 대외법률부는 각종 입찰 업무를 각각 맡고, 수출입부는 세관·보세·통관 검사 등을 전담하고 있다.

은 3대 세습 작업이 순조롭게 안착하려면 경제 업적으로 민심을 잡아야 하는 만큼, 경제난 해결에 ‘올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북한은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으로 ‘당당한 강국으로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국제경제관계에서 전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설 기틀이 마련되고 2020년에는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당당하게 올라설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게 됐다’고 덧붙였다.⁴⁵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문제 해결에 더 치중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말에 제정⁴⁶ 및 개정⁴⁷한 14개 경제관련 법에서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김정일 사후에 개정(2011.2.21)된 법이 7개⁴⁸나 된다. 투자기업 특혜조치, 국제법 기준 수용 등 대부분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투자자의 재산보호, 기업경영의 자율성 보장, 투자자 소득 보장, 투자자 이익의 송금 자율성 부여, 투자자 세금우대, 투자 및 출입 절차 간소화, 지적재산권 보호, 신변안전 및 인권 보장 등이 특징적이다. 특히 14개 법 모두에 “투자 재산을 국유화하지 않으며, 거둬들일 경우 보상을 한다”는 규정을 삽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이다. 투자 기업 친화적으로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함으로써 북한이 외자유치에 본격 나서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인다. 외국기업 투자자산을 일방적으로 몰수 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투자자의 소득과 이익 송금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다. 경제무역지대에서 기업 경영(생산, 판매, 인력 채용, 임금지급, 가격 결정 등)을 간섭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김정일 사망(2011.12.17) 직후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법을 7개나 개정한 것은 김정은 체제에서 외자유치를 늦출 수 없는 북한경제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은 체제의 영향을 우려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개혁·개방과 체제 수호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은 우선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경제문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국가공급능력의 한계와 자원 및 재원

⁴⁵ 『연합뉴스』, 2011년 1월 15일.

⁴⁶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법 (2011.12.3).

⁴⁷ 나선경제무역지대법, 외국인기업법,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외국인투자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투자기업회계법, 외국투자은행법, 토지임대법, 합영법, 합작법 등 13개 경제관련법.

⁴⁸ 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투자기업회계법, 외국투자은행법이다.

부족으로 자립적 경제로는 북한경제 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만간 부분적으로 시장지향적인 조치들이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아래든 위든”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 즉 개방정책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⁴⁹

북한은 전면적 조치보다는 거점식 개발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북한은 경제개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대북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의존하려 할 것이다.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를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해 중국과 공동개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국의 동북3성 지역과 북한 북부 접경지역의 다리,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연계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즉 북한은 2010년 1월에 나선시의 특별시 격상, 나선 경제특구법 개정, 국가경제개발총국 설립, 2010년 7월에 합영투자위원회 설립, 2010년 12월 중국과 나진, 황금평 공동개발 MOU 체결, 2011년 6월 나진,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 2011년 12월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법 제정 등을 시행하는 가운데, 북한 원정리에서 나진항으로 가는 도로를 개보수·확장하고 제2압록강대교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⁵⁰

북한당국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 지도부도 일방적 중국 의존에 대해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 무한정 확대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나선특구 및 황금평 등 접경지역 개발을 1차 경제개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철도, 항만,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광물자원개발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경제모델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북한 전반적인 경제개발로 확산하려는 전략이다.

나선특구는 6대 산업을 중점 발전시켜 선진 제조기지, 동북아지역 국제물류 중심, 지역적인 관광 중심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원자재 공업(원유, 화학, 야금, 건재 등), 장비공업(조선, 배수리, 자동차 등), 첨단기술산업(컴퓨터, 통신설비제조, 가정용전기제품), 경공업(농수산물가공 및 일용 소비품, 피복), 봉사업(창고보관 및 물류, 관광), 현대 고효율 농업(농업 새품종, 새장비 시범 도입, 농업생산체계창조)를 추진하고 있다. 황금평은 지식 밀집형 신흥경제구역으로 건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4대 산업단지(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⁴⁹ 차오위즈, “북한의 화폐개혁: 새로운 개혁개방의 신호?,” 『조경인사이트 포럼 자료집』 (조선경제, 2010.3), p. 45.

⁵⁰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북한 이해』, p. 173.

경공업)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⁵¹

북한은 계속적으로 금융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재건을 위해서 합영투자위원회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등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과 공장, 기업소 확장 등에 필요한 외자를 조달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중국의 대북지원이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의 틀에서 선별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첨단 기술거래가 차단되어진 북·중 경제협력은 북한경제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고 북한에 대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야심 찬 경제개발 발전 전략이 실현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지 않고서는 거창하게 세운 경제개발 10개년 계획도 장밋빛 허상에 불과할 수 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로서는 ‘신기루’ 같은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 보다 빈사상태에 놓인 경제상황을 돌파할 현실적인 타개책을 내놓는 것이 더 현명하다.

김정은 정권은 나선특구를 조만간 개혁·개방 지역으로 공식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러시아가 본격 뛰어 들면서 나선경제특구는 북중·북러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과 협력하여 북한이 하루 빨리 ‘선군(先軍)’이 아닌 ‘선경(先經)’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V. 김정은 체제의 대남경협 전망

1.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시각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정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남쪽과의 경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불안정한 남북관계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대남경협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제난 지속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흔통치 방향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체제 불안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김정은 체제로서도 이의 해결책 모색이 절실하다. 빈곤의 함정

⁵¹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 <조중 라선무역경제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 요강> (2011).

(poverty trap)으로 자력갱생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자본 수혈이 불가피하다.⁵²

북한은 무역적자 확대와 달러화 수입의 급감 등으로 경제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경제의 가장 중요한 달러 수입의 원천이었던 대남경협 위축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일반교역 및 임가공 등 실질교역에서의 흑자와 개성공단, 금강산 등에서의 수입 등 남쪽으로부터 상당한 달러 수입을 올려왔다.

<표 11> 대남경협을 통한 북한의 연간 수입

| | 연 수입액(달러) | 비고 |
|--------------------------|-----------|--|
| 교역 및 투자협력 수입(개성공단 외) | 3억 | 임가공 수입료, 물자교역 수입 등 |
| 개성공단 수입 | 6,000만 | 북한 근로자 인건비 수입, 각종 보험료, 개성시내 임가공 수입 등 |
| 금강산 관광 수입 | 3,000만 | 관광대가 등 |
| 인도적 지원 | 1억 | 식량, 의약품 지원 등 |
| 북한 선박 우리 해역 운항에 따른 비용 절감 | 100만 | 북한 상선(1만t 급)은 제주해협 등을 통해 4시간 가량 항해 시간 단축, 한 척당 4500달러의 기름 값 절약, 한해 평균 200여척이 제주해협 통과, 연간 70만 달러의 비용 절감 |
| 합계 | 4억 9,100만 | |

최근 들어 북한은 대남경협 위축을 중국으로부터 만회하고 있지만, 지나친 대중 의존도 심화가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떨어 뜨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경제 회생을 위해서 대남경협 복원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 할 것이다.

지난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교역(개성공단 제외)은 그 규모가 연평균 56.3% 씩 증가해 오다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08년 -25.4%, 2009년 -27.0%, 2010년 -36.4%로 남북교역의 감소 폭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해 남북 교역액은 0.2억 달러에 그치면서 1991년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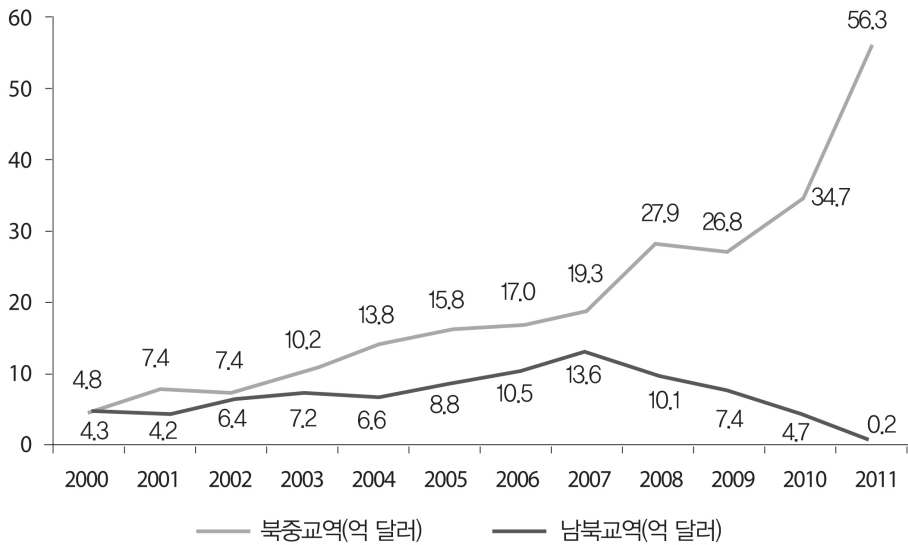
이에 반해 2010년 북중무역은 전년에 비해 32% 증가한 34억 7000만 달러로

⁵² 홍순직, “북한의 강성국가 건설과 남북경협,” 『통일경제』, 1호 (현대경제연구원, 2012), p. 20.

중국이 공식적으로 통계를 발표한 1998년 이래 최고치를 달성했다. 2011년 북·중 교역 규모는 56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늘어난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로서는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지나친 중국 의존도는 오히려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남쪽과의 경제협력 복원으로 대중 의존도 심화를 완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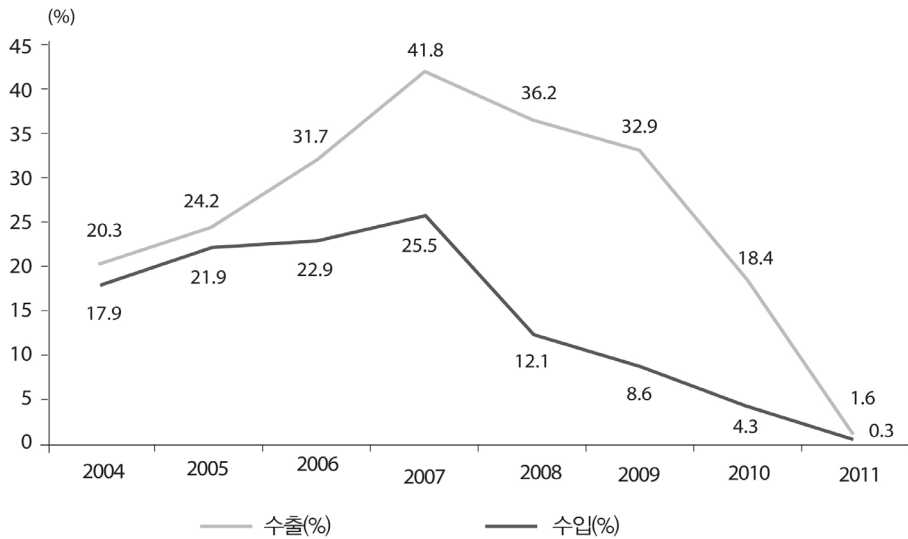
<그림 8> 남북교역 및 북중교역 추이



자료: KOTRA, 한국무역협회.

그동안 남북교역은 북한 대외무역의 30% 이상 차지하고, 북한의 수출에서 대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거의 50%에 육박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 의한 우리 정부의 5.24 조치 등으로 2010년 이후 남북교역은 급격히 위축되어 북한 무역에서 차지하는 남쪽의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그림 9> 북한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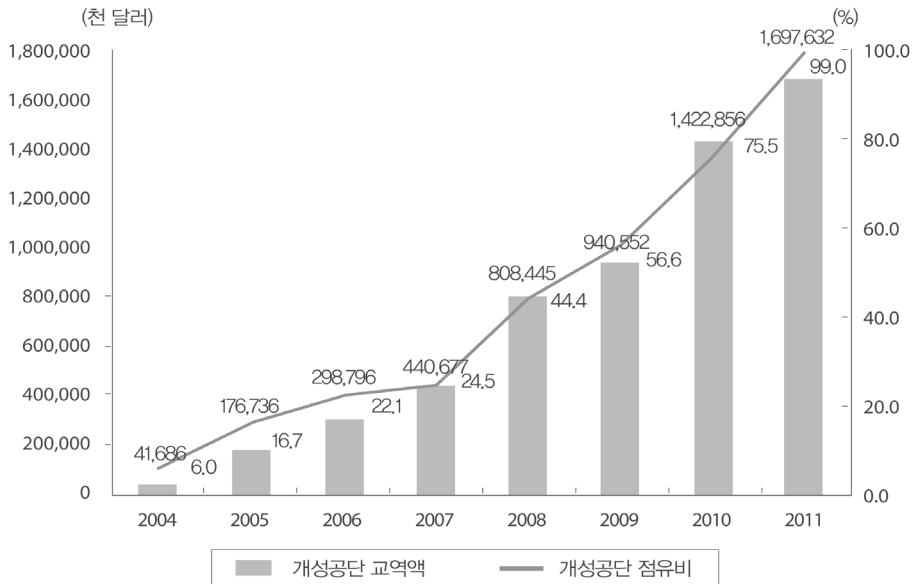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 KOTRA.

현재 남북경협에서 유일하게 가동되고 있는 것이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의 공식적인 외화를 얻을 수 있으며, 북한 근로자 5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 현재까지 개성공단 교역액은 52억 6,411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반입은 22억 681만 달러, 반출은 30억 5,730만 달러로 반출이 반입보다 더 많았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가 발생한 2010년에도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교역액은 14억 4,286만 달러(반입 7억 527만 달러, 반출 7억 3,759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남북교역 전체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개성공단은 이제 남북교역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교역 전체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4년에 6.0%에 불과하던 것이 매년 높아져 2007년 22.4%, 2010년 75.5%, 2011년부터는 99%에 달한다.

<그림 10> 개성공단 교역액 및 비중 추이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 동향』 (각 호)를 토대로 재구성.

하지만 5.24조치로 개성공단도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이다.⁵³ 1단계 개발은 완료되었지만 기업 입주율이 60%에 그치고 있으며 당초 계획한 2단계 사업은 언제 착수할 지 불투명하며, 3단계 사업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군대를 후퇴시키면서 시작한 사업인데,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도 김정일 유혹사업의 일환이다. 김정은 체제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낼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대남경협 전망 시나리오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는 향후 대남경협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남북경제협력의 파탄 책임을 남쪽 정부로 돌리면서 강하게 비

⁵³ 남북간 경제협력을 사실상 단절한 5.24 조치가 개성공단에 적용된 내용은 체류인원 축소, 기존 입주기업 투자확대 금지, 신규 입주기업 진출 불허 등이다.

난을 하고 있다.⁵⁴ 그러면서도 북한은 남쪽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경제협력 복원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북남 민간 단체들 사이의 협력·교류는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원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북남당국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모두 중단된 지금 민간단체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북과 남의 민간단체들 사이의 협력과 교류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다그치고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도 이바지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⁵⁵

김정은 체제에서의 대남경협 전망을 몇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고찰해 보자 한다. 김정은 체제가 대남경협에서 어떤 접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크게 북한 내부의 변화와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경협 여건이 어떻게 개선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두가지 축은 향후 대남경협에서 절대적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 시대가 자초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대남관계 악화 등에 의한 경협 여건을 개선하여 대남경협을 어떻게 풀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가지고 있다. 거기에서 김정은 체제에서 국제사회가 반대해 온 장거리 로켓 발사와 심지어 3차 핵실험 움직임마저 있는 상황에서 대남 경협 진전은 사실상 어렵다. 대남경협 진전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종속되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 내부적으로 군부세력과 경제세력간의 힘의 균형 정도가 대남경협에 크게 작용한다. 김정일 시대에도 그랬듯이 북한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할 때마다 군부에 부딪혀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이러한 군부의 반발을 극복하면서 경제 부흥파들이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최근 김정은 측근의 경제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김경희, 최용해, 박봉주, 태종수, 김평해, 박도춘, 문경덕, 광범기, 노두철 등의 부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⁵⁴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고발장 참조, 『노동신문』, 2012년 4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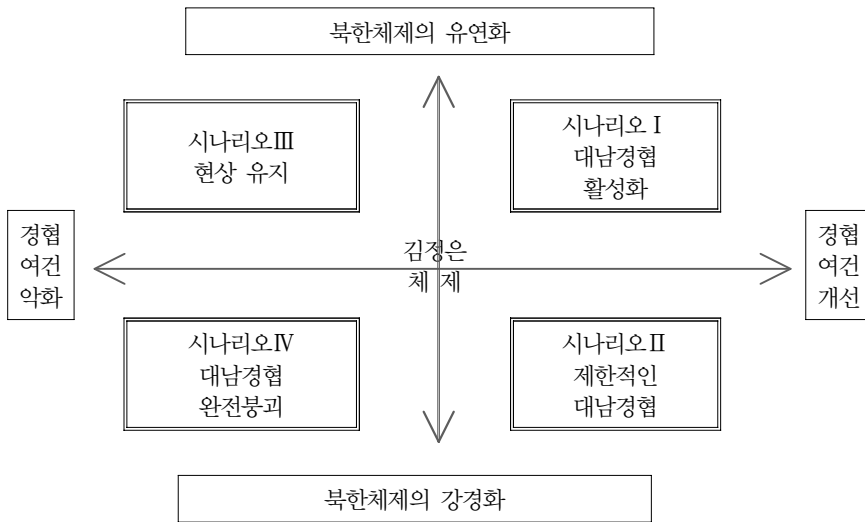
⁵⁵ 『노동신문』, 2011년 12월 3일.

<표 12> 김정은 체제의 대남경협 주요 변수

| 구 분 | | 정세판도 | 특징 |
|------------|------------|-------------|--|
| 경협여건 진전 | 경협여건 양호 | 온건노선 > 강경노선 | 핵문제 진전, 태도변화, 대화·타협, 대북지원 유연성 |
| | 경협여건 악화 | 강경노선 > 온건노선 | 도발 행위, 대북경제제재, 북한 압박 |
| 북한체제 변화 | 유연화 | 경제세력 > 군부세력 | 개혁 개방 추진, 국제사회와의 협력, 시장경제 도입 및 체제전환 시도 등 |
| | 강경화 | 군부세력 > 경제세력 | 대의 폐쇄적, 국제사회와의 비타협적, 북한체제 고수 |

이러한 4가지 변수를 가지고 대남경협 시나리오를 설정해 볼 수 있다(<그림 11>). 즉, 시나리오 I 은 대남경협 활성화, 시나리오II는 제한적인 대남경협, 시나리오III은 대남경협 현상 유지, 시나리오IV 대남경협 완전 붕괴의 경우이다.

<그림 11> 대남경협 4가지 시나리오



첫째, 시나리오 I 은 최상의 경우이다. 북핵 문제가 진전되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관계가 우호적으로 바뀌며, 북한 내부적으로도 경제파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대남경협은 활성화될 수 있다.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고 국제 사회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 등의 보상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북핵 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평화 안정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경제파가 힘을 얻어서 시장경제 요소가 확산되고, 대외적으로는 관계 정상화 추진 등으로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비롯한 경제개혁·개방과 국제기구 가입 확대 등 국제사회와의 교류도 확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 체제가 대남 관계와 경제협력에서 적극적인 행보로 나서면서 남북한 간에는 북한 경제 회생 지원을 위한 대규모 경제 지원 방안과 경제공동체 논의가 급진전될 수 있다. 민간의 경제협력은 물론, 정부 차원의 대규모 경제 지원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뿐만 아니라 원산지역까지 종합적으로 개발하려는 금강산 경제벨트를 적극 제안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숙소 건설, 출퇴근 도로 확장에서 더 나아가 2단계 개발 착수, 3단계 개발 논의 등 당초 계획한 대로 개발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나아가 2007년 10.4선언에서 합의한 대규모 개발 사업⁵⁶까지 추진하고, 나아가 북-중간에 개발하고 있는 황금평과 나선특구에 남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시나리오Ⅱ는 경협여건이 개선되면서 대남경협에서 부분적인 진전이 가능한 경우이다. 북핵문제 진전, 북한의 태도변화, 대화·타협 분위기 형성, 대북지원 유연성 등 경협여건은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내부적으로 군부의 견제 등으로 대남경협에서 큰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사상 교육과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심각한 경제난의 가속화로 탈북자 증가와 체제 불안 위기가 가시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분적인 경협재개는 이루어 질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 일 것이다. 북한은 5.24 조치 해제를 강하게 요청하면서 경협사업 재개에 적극 나서

⁵⁶ 10.4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경제 분야에서 ①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 ②해주시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 ③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 ④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 ⑤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한바 있다.

지만, 과거의 경협사업 복원 수준 정도에 그칠 것이다. 개성공단은 1단계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은 없지만, 분양받은 업체들의 입주는 재개 될 것이다. 5.24조치 해제로 북한의 내륙지역 임가공 업체의 사업 재개는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 및 태도변화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셋째, 시나리오Ⅲ은 대남경협이 현재의 상태에서 유지되는 경우이다. 핵문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둘러싼 북·미간, 그리고 남북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여 현재와 같은 대립 및 긴장이 이어지면서 경협 여건은 별다른 개선이 없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북핵문제에서 변화가 없고, 김정은 체제가 신뢰를 주지 못하면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남북관계도 북핵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상황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본격적인 경제협력 재개는 한계가 존재할 것이다.

그렇지만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의 경제파들은 미국의 대북강경에 의한 경제 문제를 대남경협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 개혁과 개방 노력은 시도하겠지만, 경협여건 자체가 악화되어 경제협력은 현재 상태에서 머물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경우처럼 개성공단만 유지될 뿐이다. 다른 지역 경협에 대해서는 5.24조치가 유지되면서 경협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시나리오Ⅳ는 대남경협이 완전 붕괴되는 최악의 경우이다. 김정은 체제가 강성노선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 압박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으로 대외관계가 악화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은 추가적인 대남도발 등 군사적인 초강경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긴장도 더욱 고조될 것이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와 남북 경협은 급속히 냉각되어, 당국간 대화 완전 중단은 물론 민간의 경협은 더 이상 재개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사태 책임을 남북간 서로 떠넘기다가 일정 시점 후 폐쇄되는 상황까지 갈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것처럼 김정은 체제에서 전개될 수 있는 남북경협 전망을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구상해 볼 수 있지만, 당분간은 시나리오Ⅲ의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움직임 등으로 북·미간 갈등이 재개되고, 남북간에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경협 여건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MB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계속 고수하면서 5.24조치를 해제할 가능성도 낮다. 북한으로서도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남쪽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자존심을 굽히면서 경험 재개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중 경험 확대로 북한이 일정한 대안을 마련한 상황에서 당장 대남경협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 정도만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 남쪽의 새로운 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한은 경험을 중심으로 다소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물자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남북경협 재개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관계 진전 등 경험 여건 개선과 북한 내부적인 유연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는 것은 앞으로 201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과 북은 지금부터라도 경제협력이 시나리오 I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V. 결론

김정은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 등으로 김정은 체제의 압축승계 작업이 마무리 되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대내외 과시와 내부 체제 공고화를 위해 정치·군사적으로 강경 노선을 견지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거센 압박을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국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김정은 체제가 직면한 또 하나의 과제이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진 지금의 경제난 해결 없이는 김정은 체제도 장담 할 수 없다. 주민들로부터의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막 출범한 김정은 체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향후 경제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선군경제발전을 유지하되 경제정책의 변화를 서서히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신문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김정은 체제는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민생활 개선에 정책적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 체제에서는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경제특구 개발과 점진적인 개혁·개방 노선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외화난, 전력·에너지난 등으로 자력갱생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경제 문제 해결에서 남쪽의 지원과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남경협에서 과거보다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문제는 김정은 체제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정책들이 제대로 추진 될 수 있을 것인가이다.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다른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조언을 하면, 첫째,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대외적인 신뢰를 회복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북 경제제재 조치 완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김정은 체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김정은 체제는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의 체제 안정에 더 도움이 된다.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 동시에 공산당의 권력을 공고화 하는 데에도 성공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점진적인 개혁·개방의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 경제 관료들의 시장경제 마인드 제고와 외자유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외자 맞춤형 경제특구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자원 및 재원 부족과 외자유치의 한계 등으로 북한 경제 전체를 한꺼번에 그리고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거점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 개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경제특구의 성공 여부는 결국 외자유치가 잘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다. 외국 자본을 적극 끌어 들이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북한 개념식 경제특구(체제를 우려한 제한적 조치)로서는 성공하기 어렵다. 기업경영 자율성과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는 투자가 위주의 경제특구가 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경공업 및 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전환하고, 지하자원 및 관광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과 경공업 분야를 육성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 난을 해결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여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새 지도부는 경제회생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남쪽의 새마을 운동 모델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체제는 북한 경제 발전에 있어서 남쪽과의 협력이 절대 조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태도 변화를 통해 남북경협을 복원시키고 나아가 민족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남북이 손잡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대륙으로 함께 뻗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우리 정부도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경제 분야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 출범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적 멘토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남북경협과 북한경제 문제 해결 수준을 넘어서 통일경제의 관점까지 고려한 한반

도 개발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맞아 남과 북이 상호 협력하여 한민족 경제 성장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정보가 잘 공개되지 않는 북한 특수성으로 인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적 과제와 전망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북한 내부의 자료와 정책적 변화 등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와 그에 맞는 우리 정부의 올바른 대북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접수: 04월 16일 ■ 심사: 05월 15일 ■ 채택: 05월 3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봉호. 『선군으로 위력 떨치는 강국』. 평양출판사, 2005.
 박형중·조한범·장용석.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2009.
 임강택·조봉현 외. 『북한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2010.
 정영태 외.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KINU연구총서 11-04. 2011.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2008.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2012.

2. 논문

- 권영경. “김정일의 북한경제 회족·정상화 전략과 거시 경제적 결과.” 『수은북한경제』. 겨울호, 2009.
 김덕호.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를 앞세워 나가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의 필수적 요구.” 『경제연구』. 2호 (사회과학원), 2004.
 김병욱. “김정은 권력승계 이후 선군경제운영과 국제사회 변화 동향.” 『KDI북한경제리뷰』. 2월호, 2012.
 김석진.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체제 변화 전망과 시사점.” 『통일경제』. 1호 (현대경제연구원), 2012.
 김재서. “선군원칙을 구현한 사회주의경제관리.” 『경제연구』. 1호 (사회과학원), 2004.

- _____. 두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조중공동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 <조중 라선무역경제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 요강>. 2011.
- 동용승. “2012 북한경제 전망.” 『KDI북한경제리뷰』. 1월호. KDI, 2012.
- 리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활로를 열어주신 불멸의 공헌.” 『경제연구』. 1호 (사회과학원), 2004.
- _____.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새롭게 정립하신 선군시대 사회주의경제건설 로선.” 『경제연구』. 2호 (사회과학원), 2003.
- 배종렬. “북·중간 광물성생산물 무역과 북한의 선군경제건설론.”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한국수출입은행), 2009.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 2011년 1월호.
- 양문수. “김정은 시대의 증장기 경제정책 변화 전망.” 1호. 현대경제연구원, 2011.
- _____. “북·중경협 심화가 북한에 야기하는 도전과 기회.” 평화재단 52차 전문가 포럼, 2012.
- 이교덕. “김정은 체제와 2012년.” 『KDI북한경제리뷰』. 1월호. KDI, 2012.
- 임수호. “김정일 정권 10년의 대내 경제정책 평가: ‘선군 경제노선’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수출입은행), 2009.
- 홍성남. “현 시기 국가예산자금에 대한 수요변동의 중요 특징.” 『경제연구』. 2호. 사회과학원, 2005.
- 홍순직. “북한의 강성국가 건설과 남북경협.” 『통일경제』. 1호. 현대경제연구원, 2012.
- _____.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북한 경제발전 전략 평가와 전망.” 『통일경제』. 여름호 (현대경제연구원), 2010.
- _____. “포스트 김정일 시대 개막: 2012년 유헌통치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11.
- 홍익표. “김정은체제의 북한, ‘경제강국 건설’의 전략과 과제.” 평화재단 52차 전문가 포럼, 2012.
- 조동호. “북한 공진화 전략 연구: 경제.” EAI 북한 공진화전략 연구패널 보고서 No. 4. 2010.
- _____. “북한경제의 현황 평가와 미래 전망.” 『KREI 북한농업동향』. 제13권 1호 (KREI), 2011.
- 조봉현. “북한의 경제상황과 사회변화.” 『최근 북한의 내부변화와 3대 세습체제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 자료, 2010.
- 차문석. “선군시대 경제노선의 형성과 좌표.” 『통일문제연구』. 21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2009.
- 차오위즈. “북한의 화폐개혁: 새로운 개혁개방의 신호?.” 『조경인사이트 포럼 자료집』. 조선경제, 2010.

3. 기타자료

- 박형중. “2012년과 후계구축 및 강성대국 건설.” Online Series Co 12-13, 2012.3.20
- _____. “김정은 정권은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가?.” Online Series Co 12-21, 2012.5.4.
- 전현준. “김정일 생일과 김정은 정권.” Online Series Co 12-05, 2012.2.14.

- 조 민. “포스트-김정일 체제의 정권진화와 개발독재체제.” Online Series Co 11-36, 2011.12.26.
- 조한범. “김정은 정권 권력재편과 위기요인 진단.” Online Series Co 12-23, 2012.5.11.
- 최진욱.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 정세 전망과 정책방향.” Online Series Co 11-35, 2011.12.20.

『국민일보』.

『노동신문』.

『노컷뉴스』.

『연합뉴스』.

『조선신보』.

『VOA 방송』.

『자유아시아방송(RFA)』.

『每日新聞』.

Abstract

The Economic Agenda and Prospects in the Kim Jong-un Regime

Bong-Hyun Ch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ticipate North Korea's political challenges, economic agenda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under the Kim Jong-un regime. Due to the Military First Policy (*Songun*), the economy is facing a severe crisis, and accordingly, the North Korean pending agenda is focused on overcoming the negative economic growth, high inflation and food shortages among other issues. According to the *Rodong Sinmun*, the current North Korean government appears to be more interested in the economic sectors than the Kim Jong Il regime. It may change its political stance on agricultural sectors, the standard of living, mining sectors and electric power. In addition, the Kim Jong-un regime's foreign policy agenda may transition the country towards a more open and innovative policy as a means to induce foreign investments. In the short-term,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is difficult to resume. Nevertheless, the reduction of its dependence on the Chinese economy and the consolidat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may occur more realistically in the medium and long-term.

Key Words: Military First Policy, Economic Reform,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Rodong Sinmun